

# 1월 특별법 마련→2월 국회 통과→3월 통합 실행→6월 선거

##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개소  
본격적인 실무 작업 착수  
2월 법안 통과 1차 '분수령'  
27개 시·군·구 순회 주민설명회  
쟁점 조율·주민 동의가 관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양 시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만큼 1월 중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1단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날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정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양 시도는 이날 중순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 성안을 마칠 계획이다. 대구·경북 사례를 참고하여 296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257개의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한 타임테이블은 분 단위로 쪼개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정준호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질 만큼 숨 가쁘다. 6일 시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주관 토론회가 열리며, 8일에는 통합 논의의 중심점이 될 '행정통합 추진협의회'가 키오프 회의를 갖는다. 특히 오는 15일 예정된 '통합법률 입법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은 뒤, 이달 말까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의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1단계 목표

다. 이를 위해 9일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민감한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도 진행된다. 8일 구성되는 추진협의회는 문화경제부시장장을 단장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청 부교육감급, 시민단체 및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가칭 광주전남특별시 등), 청사 소재지,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폭발력 있는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도청에서 참석자들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헌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세종>

주민 공감대 형성도 시급한 과제다. 시도는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송과 SNS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방침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쟁점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로 같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 구상대로 2월 중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3월부터는 사실상 통합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 준비단'이 가동되어 조직 및 인사 운영, 자치법규 정비 등 구체적인

인 행정 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일정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돌아간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며, 당선인은 한 달간의 인수 과정을 거쳐 2026년 7월 1일 통합지방정부의 닳을 올리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2월 법안 통과가 이번 통합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사·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기한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통합 '초광역자치도' 7월 출범 목표

특별법, 선거 로드맵 관심  
현 시·도지사 직 유지한 채 출마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통합 자치단체의 출범 시기와 선거 방식, 공무원 승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026년 7월 1일자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며, 정부 직할의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가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례 조항이다. 법안 부칙 제2조는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일, 즉 2026년 6월 3일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이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광주전남자치도지사' 한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적 선택을 가를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은 예외를 인정했다. 법안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 즉 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통합 도시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절차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보장한 조항으로, 현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주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통합 전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법 시행일 10일 이내에

통합 도시사 선거 출마 의사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기존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통합 선거 비용에 포함되며, 이미 발송한 홍보물 수량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이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보자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지방의회 구성 방식도 명시됐다. 통합 자치도의 의원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해 선출한다. 지역구 명칭은 광주전남자치도 명칭 뒤에 기존 선거구 순서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른다.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명문화했다. 통합 자치도 출범 당시 기존 사·도 소속 공무원은 광주전남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이 자동 승계된다. 또 기존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은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처분과 민원 서류역시 통합 도시사 명의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해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금이 골든타임"

강시장 "정치유불리 따질 때 아냐"  
김지사 "지역주도 통합 모델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정례조회에서 행정통합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추진' 우려에 대해 "지난 30년간 네 차례나 시도됐던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전남도의 제안, 광주시의 호응이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가 갖춰진 적기"라고 일축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얻게 될 거대한 공익 앞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유·불리는 '조속지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펄크'처럼, 광주가 통합의 물꼬를 트는 선구자가 되자"고 독려하며, 80년 5월과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역

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광주의 저력을 상기시켰다. 김 지사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목표는 오는 7월 통합 정부 출범"이라고 못 박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과감한 권한 이양,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며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하루에 천리를 가는 기세로 통합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효과로는 반도체·AI(인공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도약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유치 우위 선점 등을 꼽았다. 양 단체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 아래 진행된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강 시장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김 지사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통합 모델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7월 통합 정부 출범'이라는 파격적인 시간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사·도민 여론 수렴과 특별법 제정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교육발전특구×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고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 인재를 육성합니다!



### 광주보건대학교

고교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로! 보건의 내일을 여는 글로벌 대학

### 기독교간호대학

실무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독교간호인재 양성 대학

### 남부대학교

미래를 여는 한 걸음! 대학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 동강대학교

특성화고 진로, 동강대에서 키워 지역 정주로 완성하다

### 서영대학교

고교와 대학을 잇다, 서영대가 만드는 미래형 인재의 길

### 조선간호대학교

나의 간호 꿈, 고교에서 미리 준비하고 조선간호대학교에서 완성해요

### 조신이공대학교

빛고를 미래인재 양성 통합 직업교육

###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기술인재, 고교에서부터 키웁니다!